



2023.09.11.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8호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8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CONTENTS

1. 서론	06
2.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08
3.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도출	11
4.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14
5. 주요 갈등 이슈 세부 분석	17
6. 결론 및 시사점	22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영향으로 인한 주민수용성 등의 갈등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편중 현상과 계통용량 부족 및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수용성 외에도 계통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부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질 경우 탄소중립 달성 여부뿐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단계별(보급-송배전-활용)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와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별로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함

전문가 FGI를 통해 보급-송배전-활용-공통 적용의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9가지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갈등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함

-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는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함
- 우선순위 분석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관련 갈등, 송배전망 설비 관련 주민 수용성이 주요 갈등 이슈로 선정됨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우선순위 평가 결과>

단계	갈등 이슈	우선순위 평가 결과			
		갈등해결의 시급성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	종합
보급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1순위			1순위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2순위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1순위		
송배전 (계통연계)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3순위		3순위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2순위		2순위	
활용 (소비)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2순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1순위	1순위	2순위
공통 적용	발전원별 갈등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한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국내에서는 단일 전력망과 경직된 전력시장 구조,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단계별로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갈등에 대한 고찰 필요
-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미흡과 제도의 절차상 문제 등이 갈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할 수 있어 갈등 완화를 위해서도 정책의 체계성 제고와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
- 정부는 갈등의 주요 당사자로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갈등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입법 추진 필요
- 갈등 예방과 중재,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갈등관리 기구 설립 등 현실적 방안 검토 필요

1. 서론

-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최근 연 2~300GW씩 증가하여 2015년 1,975.7GW에서 2021년 3,257.7GW로 총 1,282GW 증가하였으며, 발전량으로는 2015년 5,506.2TWh에서 2021년 7,854.5TWh로 총 2,348.3TWh 증가함(IEA¹⁾)
 - 2020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8.0%, OECD 국가 평균은 30.0%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20%를 넘어섰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44.2%, 43.5%로 40%를 초과함(OECD.stat²⁾)
 - IEA, IRENA 등 국제기구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30년에는 60%, 2050년에는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IEA, 2022; IRENA, 2023)
 -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20.0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누적 설비용량이 2017년 12.2GW에서 2021년 29.1GW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발전량도 21.0TWh에서 43.7TWh로 증가
-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및 경관 영향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³⁾
 - 미국에서는 293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역주민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연 또는 취소됨⁴⁾
 - 독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갈등조정 기구인 KNE(자연보호와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
 - 국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로 2017년 허가받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 중 37.5%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으며(박두웅, 2018),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됨(이혜정 외., 2020)

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tools/renewables-data-explorer>

2) <https://stats.oecd.org/>

3) 이상훈·윤성권, (2015); 이상범 외. (2019), Marco Segreto et al., (2020)

4) <https://renewable-energy.mit.edu/>

-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1%(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특정 지역편중 현상과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계통접속 지연, 출력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수용성 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과 경북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계통용량 부족 및 계통 불안정으로 접속지연*과 출력제어⁵⁾** 증가
 - * 2022년 말 기준 접속대기 누적 물량은 2.5GW 수준으로, 그중 76%가 호남에 집중(산업부, 2022.11)
 - ** 제주도 내 출력제어 횟수는 2017년 14건에서 2022년 1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3월까지 33회 진행함⁶⁾. 호남지역에서도 2021년부터 출력제어를 시작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향후 발전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계통 안정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⁷⁾,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저항과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⁸⁾
- 또한 RE100,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으로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갈등 발생과 더불어 산업경쟁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RE100이 확산되며 국내 기업들도 RE100 이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으로 RE100 이행이 어려울 경우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14.7%(대기업 28.8%, 중견기업은 9.5%)가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⁹⁾, 경기도 내 RE100 참여기업과 잠재적 참여기업 90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 28개 중 64%, 글로벌 RE100 기업 15개 중 73.3%가 고객사의 RE100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EU CBAM 도입과 ESG 확산으로 산업부문 사용 전력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전반에서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이슈를 포함하여 보급(발전)-송배전(계통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갈등 이슈별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 등 이슈별 세부 분석을 통해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5)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량과 출력이 예측을 벗어날 경우, 전력망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6) 전력거래소, (2023.8.28. 접근), (<https://www.kpx.or.kr/menu.es?mid=a10107020000>)

7) 변동성 재생에너지(Variable Renewable Energy, VRE) 비중이 5% 이내일 때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비중이 5%를 넘어가면서 계통 운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비중이 10%를 넘어가면 계통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여 계통 유연성이 중요해짐(IEA, 2018)

8) 전기저널(2023.4.14.), '(사설)전력계통에 불거진 복합적 갈등..시장제도 손질 등 대대적 변화 요구된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90;>, 한국일보(2023.6.11.), "태양광 40%까지 는는데 원전도 증가하니" 에너지 출력 갈등 더 커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114080001395?did=NA>

9)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2.8.29.),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CHAM_CD=B001&SEQ_NO_C010=20120935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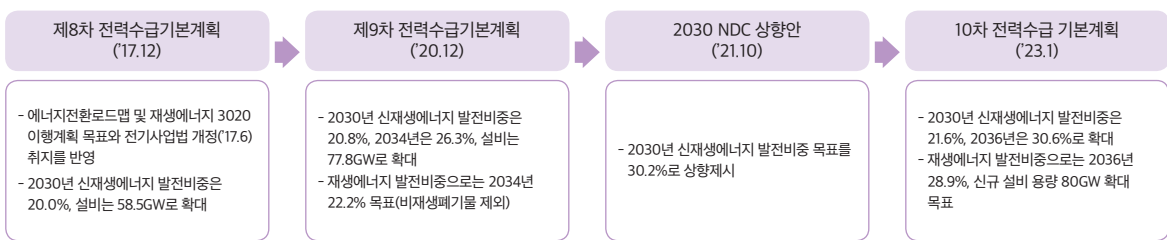
10) 고재경, (2023.6),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RE100,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 경기연구원, GRI 이슈&진단, No. 528

2.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

1)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는 2017년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 NDC¹¹⁾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어 왔으며,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036년 28.9%임

<그림 1>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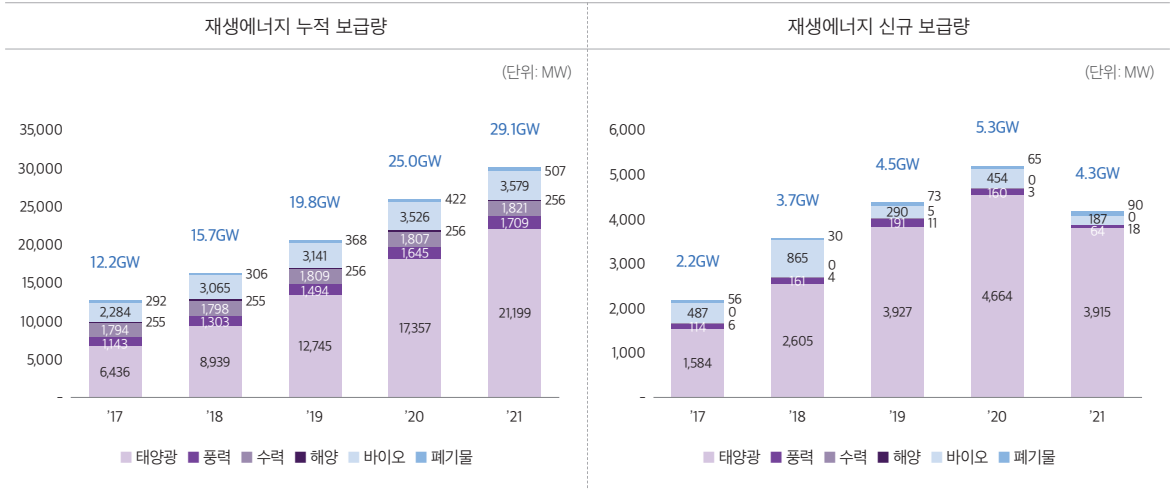


2) 보급 현황

-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12.2GW에서 2021년 29.1GW로 138.2% 증가
 - 2017년 이후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34.7%의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간 신규 설치량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2.2GW에서 2020년에는 5.5GW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4.3GW로 다소 감소
 -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뤄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20.0GW의 83.4%인 16.7GW가 태양광이며, 풍력은 3.4%, 바이오가 11.4%를 차지함

1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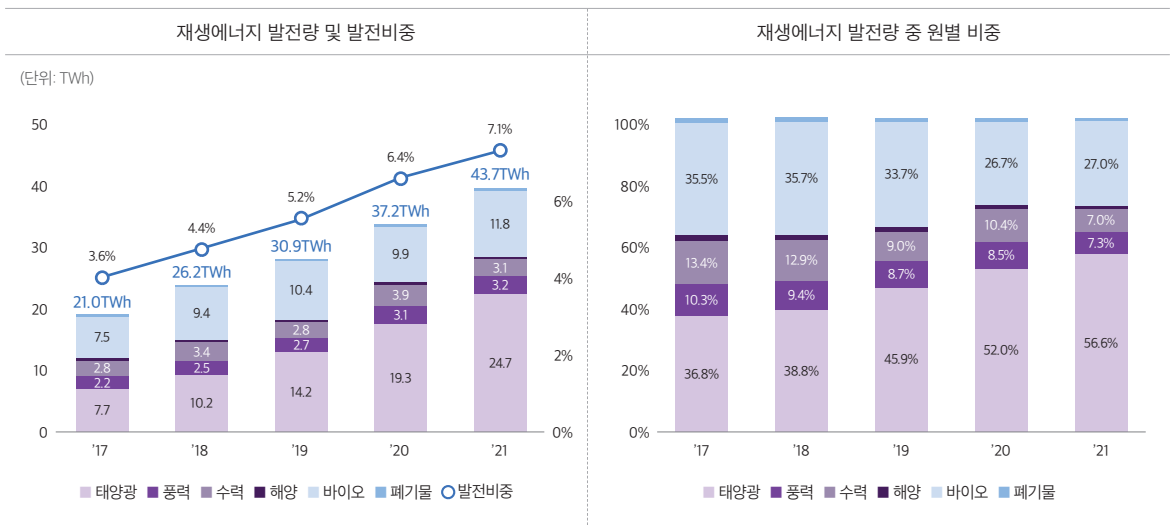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및 신규 보급량 추이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 21.0TWh에서 2022년 43.7TWh로 2배 이상 증가하고, 발전 비중은 3.6%에서 2021년 7.1%로 증가
-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변동성 전원인 태양광 및 풍력의 비중이 2017년 47.2%에서 2021년 63.9%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발전량 중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21년 4.6%로 증가하면서 계통 안정성에 영향

<그림 3>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비중 추이와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 추이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 2021년 기준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순으로 많이 보급되었으며, 발전량으로는 전북, 전남, 충남, 강원 순으로 많이 발전함

- 태양광 중심의 대부분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계통용량 부족으로 접속지연, 출력 제한 등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바이오 보급 용량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크게 나타남

<그림 4> 2021년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및 발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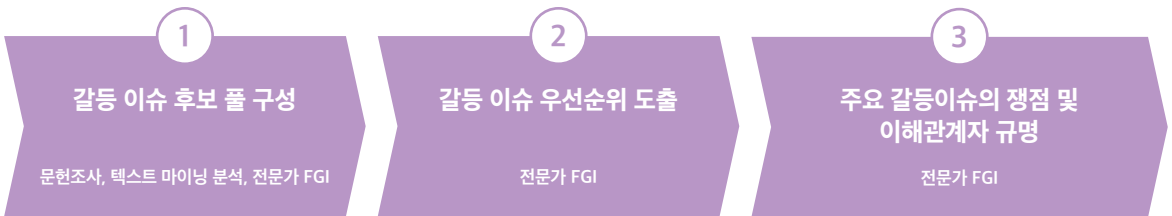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3.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도출

1)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도출 방법론

- 국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규명을 위해 문헌조사 및 재생에너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FGI를 두차례 실시함
 - 전문가 FGI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입법 전문가, 산업/지역 관계자, 시민단체 등 10인이 참석함
 - 1차 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발전)-송배전(계통연계)-활용(소비) 각 단계별 갈등 이슈 후보 풀과 이해관계자 풀을 구성함
 - 2차 회의를 통해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범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등을 논의함

<그림 5>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도출 방법론 개요



- FGI 진행 시 갈등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제시함
 - 갈등 이슈: 이해관계자별 갈등 혹은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포괄하는 이슈
 - 쟁점: 이해관계자별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세부 사안

2)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범위 도출

- 문헌조사와 전문가 FGI 등을 통해 보급(발전)-송배전(계통연계)-활용(소비)의 각 단계별 갈등 이슈와 전 단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9가지 갈등 이슈를 도출함

<표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의 종류와 정의

단계	갈등 이슈	정의 및 범위
보급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확보, 공청회 및 주민동의, 이익공유, 경제적 보상방안 등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급격한 재생에너지 허가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발전사업자 간, 발전사업자 간 갈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발전설비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및 요금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송배전 (계통 연계)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변전소, 송배전선로, 해상연계선로 등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역 영향, 선하지 보상, 지중선로 연계 요구 등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갈등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계통용량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문제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된 갈등
활용 (소비)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RE100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기업과 관련된 갈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계통 안정화 관련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자원 마련 방안과 비용 부담 주체 관련 갈등
공통 적용	발전원별 갈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원별 수용성 문제 및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원별 갈등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가이드라인 부재, 부처 간/기관 간 협력 미흡으로 정책 결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조율 문제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등

- 1차 FGI를 통해 앞에서 제시된 갈등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위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 사업자, 기관, 수요처, 국민, 기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목록을 정리함

<표 2>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관련 이해관계자 목록

구분	이해관계자 목록
정부	① 중앙정부, ② 광역/기초지자체
사업자	③ 전통에너지원 발전사업자, ④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⑤ 개인사업자
기관	⑥ 한전, ⑦ 전력거래소
수요처	⑧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국민	⑨ 지역주민, ⑩ 일반 국민(전력소비자)
기타	⑪ 국회, ⑫ 환경단체(시민단체)

4.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1)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방법론

- 2차 FGI를 통해 앞서 도출된 갈등 이슈 중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주요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자 우선순위를 분석함. 이를 위해 우선순위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고, 평가 기준별로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
 -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순으로 1~3순위를 선택하도록 요청함. 전문가별 1~3순위로 선택한 항목을 3점~1점으로 배점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Fdimension_j$)를 산출

<표 3>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기준

평가 기준	세부 설명
갈등 해결의 시급성	갈등 상황의 심각성과 갈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갈등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평가
사회적 영향	갈등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평가
중장기적 중요성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갈등 관리와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

- 갈등 이슈에 대해 3가지 평가 기준별로 1~3순위 선택 결과를 3점~1점으로 배점하고 산술평균하여 각 갈등 이슈의 평가 기준별 가중치($Fissue_{kj}$)를 산출함. 이렇게 산출한 갈등 이슈의 평가 기준별 가중치에 앞서 산출한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곱하여 각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점수($Score_{kj}$)를 산출

$$Score_{kj} = Fdimension_j \times Fissue_{kj}$$

($Fdimension_j$: j 평가 기준의 가중치

$Fissue_{kj}$: k 갈등 이슈의 j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

$Score_{kj}$: k 갈등 이슈의 j 평가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점수)

- 각 갈등 이슈의 평가 기준별 우선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점수($Score_k$)를 산출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

$$Score_k = \sum_{j=1}^3 Score_{kj} \quad (Score_k : k \text{ 갈등 이슈의 최종 우선순위 점수})$$

2)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산출 결과,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이 중장기적 중요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갈등 이슈의 중장기적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갈등 이슈를 선정함에 있어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우선순위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 산출 결과

$Fdimension_j$	평가 기준	평균
$Fdimension_1$	갈등 해결의 시급성	2.2
$Fdimension_2$	사회적 영향	2.2
$Fdimension_3$	중장기적 중요성	1.6

-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반영한 각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점수 합산 결과, 1순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갈등’,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남
 - 각 평가 기준별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는 ‘갈등 해결의 시급성’ 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향’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공동 1순위로, ‘중장기적 중요성’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1순위로 나타남
 - 이 결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수용성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비용증가 관련 갈등은 시급하지는 않으나 사회적 영향과 중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슈임을 확인

<표 5>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점수 산출 결과

갈등 이슈	평가기준별 우선순위 점수($Score_{kj}$)			최종 점수 ($Score_k$)	순위
	갈등 해결의 시급성	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4.4	2.0	0.5	6.9	1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2.9	0.7	0.0	3.5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0.2	3.1	1.6	4.9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민수용성)	2.6	2.6	0.0	5.3	3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2.9	0.4	1.9	5.2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0.0	1.1	1.9	3.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0.2	3.1	2.4	5.7	2
발전원별 갈등	0.0	0.2	1.1	1.3	
정책 거버넌스 관련 갈등	0.0	0.0	0.2	0.2	

5. 주요 갈등 이슈 세부 분석

- 우선순위 분석 결과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1~3순위에 해당하는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해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등을 고찰함
 - 갈등 이슈별 세부 사항은 2차 FGI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며,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당사자, 2차 당사자, 주변 당사자로 분류¹²⁾하여 정리

<표 6> 이해관계자 구분 기준

구분	내용
주요 당사자 (Primary parties)	갈등에서의 주된 행위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2차 당사자 (2nd parties)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적 이해관계자
주변 당사자 (Peripheral parties)	갈등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 (개요) 본 갈등 이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 보상 및 이익공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대표적 갈등임
- (쟁점) 본 갈등 이슈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부지확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환경 영향 및 경관 훼손, 부동산 하락 및 농어업 피해 문제
 -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대상 공청회 및 주민 협의 절차 등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
 - 발전사업자 및 지역주민 간 적절한 이익공유 방안, 경제적 보상방안 마련(지역주민 간 갈등 포함)

12) 이선우 외., (2021), '갈등연구방법론',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해관계자) 본 갈등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해당 지역주민이 갈등의 주된 행위자이며,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인허가를 결정하는 중앙정부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광역/기초지자체도 주요 당사자로 포함될 수 있음
 - 발전사업 및 인허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발전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계통망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하는 한전은 2차 당사자로 볼 있으며,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공급받는 일반 국민과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은 주변 당사자로 볼 수 있음

<표 7>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구분	대상 이해관계자
주요 당사자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2차 당사자	국회, 한전
주변 당사자	일반 국민,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 (갈등의 원인) 본 갈등 이슈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부족과 보급 관련 종합 컨트롤타워 부재,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
 -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개별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입지를 연계하는 중간 계획 단계가 부재하며, 발전사업자 중심의 법/제도 수립과 민간주도의 입지개발을 추진하여 비체계적으로 보급
 - 보급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재하며, 발전사업허가 주체인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조율과 인허가 절차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상 문제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음
 -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수준의 이격거리를 설정
- (정부의 역할) 본 갈등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입지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 국가에너지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지역 산업/경제계획, 송·배·변전선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수립
 -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준을 이격거리규제가 아닌 입지 규제 개선하고, 주민수용성 사전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
 - 지역주민의 절차적 참여규정 보완 등 주민참여사업 개선과 합리적 이익공유 거버넌스 확립, 재생에너지 관련 보상체계 마련 등 수용성 제고 방안 제도화
 - 투명하고 체계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
 - 사업자 중심의 보급 정책을 개선하고 일관된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추진

- (국회의 역할) 국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장을 제공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제도적 솔루션을 제안
 - 기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풍촉법)¹³⁾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고, 중립적인 재생에너지 갈등 중재 기구 구성 및 지원 필요

2)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 (개요) 재생에너지 확대로 계통보강 및 안정화 비용증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등의 재원 마련과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쟁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
- (이해관계자) 본 갈등은 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요금을 결정하는 중앙정부와 송배전망 구축 및 전력판매를 담당하는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 그리고 전력소비자이자 요금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를 주요 당사자로 볼 수 있음
 - 재생에너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 전력공급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 지자체를 2차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수요기업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자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당사자로 볼 수 있음

<표 8>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구분	대상 이해관계자
주요 당사자	중앙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 일반 국민, 국회
2차 당사자	광역/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주변 당사자	해당 없음

13)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등 47인)' 외에도, 2023년 2월에 해상풍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의원 등 10인)'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등 12인)'이 추가 발의되었으며, 현재 3건의 법안은 산자위 계류 중인 상황임

- (갈등의 원인) 본 갈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 추계와 자원 마련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사회적 논의가 전무하고,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 및 비용과 편익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부족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유연성 자원, 변동성 대응용, 예비력, 수용성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추계 및 자원 마련을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자원 마련을 위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노력 부족
 - 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시장 구조와 정부의 전력요금 통제로 전력시장에서 가격 신호가 미작동
 - 재생에너지 정책에 보급목표 수립 외에 원별/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장기적 보급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비용증가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
 -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정책 수립의 근거, 비용과 편익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 부족
- (정부의 역할)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근거와 비용·편익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필요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일관된 재생에너지 정책 마련과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필요
 -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정책 수립의 근거, 관련 비용과 편익 등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기요금의 합리화 및 지역별/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개편
 - 원별/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보급 우선순위 및 장기적 보급계획 등 국내 여건에 맞는 보급 활성화 제도 수립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력시장 개편으로 비용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시장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비용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제도 마련 등의 지원을 병행
- (국회의 역할) 국회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정부 계획 지원을 위한 예산과 법률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지역간 차등요금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편익 관련 객관적 자료 요구와 더불어 정부 계획 지원을 위한 예산, 법률 지원 강화

3)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 (개요)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부터 발생해온 갈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로 직접 야기된 갈등은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송배전망 추가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심화되는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의미함

- (쟁점) 송배전망의 인근 지역 영향과 보상 문제
- (이해관계자) 본 갈등은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와 전력망 설비 구축을 담당하는 한전, 그리고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주요 당사자에 해당함
 - 그 외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에 갈등으로 인해 송배전망 확충이 안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존 전통 에너지원 발전사업자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2차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환경 단체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도 2차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전력 소비자인 일반 국민은 주변 당사자에 해당함

<표 9>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구분	대상 이해관계자
주요 당사자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한전, 지역주민
2차 당사자	전통에너지원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환경단체, 일반 국민, 국회
주변 당사자	일반 국민

- (갈등의 원인) 본 갈등은 계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입지계획 부재로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전력 수요지로의 전송을 위한 송배전망 추가 건설로 인해 발생하며,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
 - 선입지 선정, 후계통 연계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 수요지로의 운송을 위한 송배전 설비 등 전력망 인프라 보강 필요성이 급증
 -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망 관련 수용성 확대 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 부재
- (정부의 역할)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망 수용성 확보 노력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수요 분산화를 위한 정책 강화 등 필요
 -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득과 자원 마련 필요
 - 선제적으로 지역내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 송배전 관련 중장기 투자 확대 및 송배전 수요 감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수요 분산화 정책 강화
- (국회의 역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주민의 보상방안과 법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
 - 송배전망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및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송배전 관련 예산 확대
 - 주도적으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관리 제도개선 등 입법 필요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송배전망 보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

6. 결론 및 시사점

- 국내의 경우 단일 전력망과 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시장 구조,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로 주민 수용성 문제 외에도 재생에너지 단계별로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한 고찰 필요
 -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및 발전사업자들 간 갈등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계통용량 부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한 출력제한 관련 정부,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과 계통연계 관련 갈등 등 기 발생 갈등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비용증가 문제와 RE100 수요 관련 갈등들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접근 필요
 - 전문가들은 갈등 해결의 시급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갈등 이슈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과정 및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과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을 꼽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단계별 갈등 이슈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주민 수용성과 비용증가 관련 주요 갈등 이슈들의 갈등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미비함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
 -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목표 수립에 치중되어 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우선순위나 장기적 보급 계획과 체계 마련 없이 무분별한 입지선정과 급격한 인허가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
 - 특히 이러한 체계성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계통용량 부족과 안정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비용 상승과 계통 설비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계별 갈등을 연쇄적으로 유발
- 이에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체계성 제고 및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
 -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더불어 갈등 완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특성과 계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입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제도화 및 관련 인허가 제도 개선,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요금 현실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수요 분산화 정책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은 필수적
 -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로서 대부분의 갈등에서 주요 당사자에 해당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신뢰성과 체계성을 향상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국회는 대부분의 갈등에서 2차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유도하고, 갈등관리 제도뿐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입법적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강화, 이익공유 및 보상방안 마련,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요금 체계 개편 등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
- 풍족법과 같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통해 향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 또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원 확대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에너지전환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갈등 이슈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 이슈별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갈등 예방과 중재 및 조정, 사후관리 등 단계별 갈등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이성재, 2023) 이행 기반을 구축
 - 이를 위해 독일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갈등 관리·중재 기구 설립과, 정부와 한전 등 주요 전력정책 수행 기관 내 갈등관리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 검토도 필요

참고문헌

고재경(2023.6),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RE100, 지역에서 해법을 찾자', 경기연구원, GRI 이슈&진단, No. 528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2.8.29),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CHAM_CD=B001&SEQ_NO_CO10=20120935475

박두웅(2018), "태양광발전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8.28. 접근),
<http://www.ss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9>

산업통상자원부(2022.11),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이상범 외.(2019),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2019-07

이상훈·윤성권(201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법과 정책 제15권, 133p

이선우 외.(2021), '갈등연구방법론',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성재(2023), '해외전력 인프라의 갈등관리 관련 주요 사례 조사', 한전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결제 REVIEW, 2023년 제3호

이혜정 외.(2020),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 및 지역 주민 수용성 비교 연구-태양광, 풍력, 바이오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제15권 제1호 Vol. 15, Number 1

전력거래소(2023.8.28. 접근), <https://www.kpx.or.kr/menu.es?mid=a10107020000>

한국에너지공단(2022),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IEA(2018) 'World Energy Outlook 2018'

IEA(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IRENA(2023), 'World Energy Transitions Outlook 2023: 1.5°C Pathway'

Marco Segreto et al.(2020), 'Trends in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cross Europe-A Literature Review',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7(24);916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78
2023.09.04.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77
2023.08.28.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76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쉰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שמ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의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